

#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 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서동만

##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몰아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에 따른 동서독 통일과 전 세계적인 냉전의 소멸은 한반도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것이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은 국제적 고립,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이었다. 1994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연구의 '화두'는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이후 거의 10년이 다 되어온다. 남한에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대북정책이 화해·교류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되고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출범에 맞추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최근까지 남한 학계를 지배했던 붕괴론에 이어 새로운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 과연 남한 학계를 지배했던 '붕괴'란 화두가 대북정책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어떤 성과를 남겼는가 하는 자문과 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남한 학계의 북한연구가 그 동안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사회 전체에 걸쳐 거품이 빠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든 분야에서 자기 반성과 비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붕괴론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북한체제가 위기에 처

해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남한체제의 위기를 감지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체제가 위기 상황임은 누구나 인정했기에, 북한연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뒤돌아볼 생각이 거의 없었다. 문제가 항상 대상인 북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주체인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성과나 문제점을 스스로 자기 점검하는 작업은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 북한 분야에서 절실한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북한 분야 만큼 거품이 많았던 학문 분야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성적인 자세에 설 때 북한연구가 다른 분야와 먼저 비교가 되는 것은 자료 접근상의 제약이다. 북한 붕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대상에 대해 가장 우월한 위치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북한 분야에서 거꾸로 대상에 대한 자료적 접근이 가장 제약받았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제약이 많은 분야인 북한 분야야말로 지면이 가장 많고 필자도 가장 많다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북한연구와 관련된 연구여건 가운데 여전히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료 이용상의 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또한 북한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거품일 수도 있는 지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역시 북한연구를 뒤돌아보는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두고 논의하지 않으면 공론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서 북한연구의 방법 내지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논의보다 북한연구에서 부딪히고 있는 실제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주제나 쟁점을 둘러싸고 실제로 어떠한 연구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 훨씬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방법론이란 해당 연구자 자신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연구와 동떨어진 방법론 논의란 연구현실과 분리된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 2. 연구여건

### 1) 자료 이용 여건

북한연구는 과거 냉전 시대나 아직 계속되는 남북 대치 상황에 의해 크게 규정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인 냉전 붕괴 이후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자료 공개 및 이용면에서의 제약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연구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북한에 대한 무슨 발언을 하는 것이 적어도 학문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 금기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자료 이용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아직도 '특수자료 취급인가중' 없이는 자료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학술적인 연구와 교육의 중심이라 할 대학에도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제1차 자료를 소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문 외적인 연구상의 제도적·물적 기반이 바로 연구의 제1차적 요건인 자료 이용상 제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북한연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 국립공문서관 소장 노획문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집하여 간행중인 북한관계사료집이나 중앙일보사, 서울신문사, 북한연구소에서 각각 간행한 인명사전<sup>1)</sup> 이외에 최근 간행된 북한 관련 제1차 자료집은 충분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1946~1950년을 망라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북한 노획문서자료집<sup>2)</sup> 이외에는 195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 전반을 망라한 자료집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미국 포드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간행<sup>3)</sup>한 이래 나오지 않고 있다. 1980년대에 통일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록을 모은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 1) 『북한인명사전』, 북한연구소(1996), 중앙일보사(1990), 서울신문사(1995) 등.
- 2)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은 현재 1권부터 22권까지 간행되어 있다. 시기는 1946년부터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한 1953년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 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북한연구자료집』은 1969년 제1집이 간행된 이래 1980년대 중반 제11집까지 간행되었다.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에서 간행된 주요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다.

역대 당대회 회의록을 모은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대륙연구소가 북한 법령을 수집, 편집한 『북한법령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편집한 『김정일저작선』이 유용한 자료집이지만 일부 주제에 한정된 것이다.<sup>4)</sup> 중앙일보사에서 편찬한 CD-ROM판 북한백과는 최초로 영상 자료를 수록하는 등 획기적인 시도이지만, 전문적인 견지에서 보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sup>5)</sup> 북한연구소에서 연감류로서 1968년, 1983년에 이어 10여 년 만인 1996년에 『북한총람』<sup>6)</sup>을 발행한 것이 특기할 만하지만,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 북한에 관한 기본 자료집 수준이 과거 냉전하 미국의 공산권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이 현재 우리 북한연구의 현주소이다.<sup>7)</sup>

다만 정보기관에서는 상당한 정보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 사이에서는 정설로 되어 있다. 최근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대외비로 간행한 『북한지역정보총람』 전7권은 북한의 경제지리에 관한 정보를 각 시도별로 정리한 매우 유용한 자료집이다.<sup>8)</sup> 이 자료집에 수록된 정보를 학문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안기부가 소장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료집은 시간적으로는 북한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담고 있지만, 북한의 현재에 관한 자료집도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안기부 산하의 국제문제조사연구소가 매달 대외비로 간행하는 『북한정책자료』는 『로동신문』, 『민주조선』, 『근로자』 등 북한의 주요 공식매체에서 중요한 사실·논설·기사·연설·논문 등을 편집한 매우 유용한 자료집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매일 대외비로 간행하는

4) 통일원 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 1~3권(1988);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1~4권(1988); 정경모·최달곤 편, 『북한법령집』 1~5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김정일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5) 『멀티미디어 북한백과 1945~1997』 CD-ROM(중앙일보사, 1997).

6)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감 1968』(1968), 『북한총람』(1983), 『북한총람』(1996).

7) 미국 내 자료집 간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학준, 『한국정치론사전』(서울: 한길사, 1990), 848~851쪽.

8)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지역정보총람』 제1~7권(1998). 제1권은 총론, 제2권부터 7권까지는 평양특별시 이하 각 도를 다루고 있다. 자연환경, 인구와 취락, 경제와 산업, 국토개발 및 관광, 사회와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기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북한방송청취록』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의 주요 방송 내용을 편집한 자료집이다. 자매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방송의 청취록인 『주요해외방송청취록』도 여전히 간행되고 있다. 현재에 관한 이러한 자료집은 북한현상을 분석하는 데 더없이 편리한 자료들이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자료 공개가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내외통신은 천리안 등 컴퓨터 통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편집 방침도 제1차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원문대로 공개하는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통일원의 『주간북한동향분석』, 『남북경제협력 현황』 등의 자료도 컴퓨터 통신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북한 정보 제공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조선중앙통신 등 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9)</sup>

현재 신정부 들어서서 정부는 북한 정보·자료의 공개 제한 조치를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단 위에 언급한 대외비 자료들은 제1차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자료집들도 일반 판매가 가능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 대해서도 최소한 연구자나 북한 전공 학생들은 자유롭게 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도 북한연구는 상당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예술·과학 등 각 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북한의 제1차 자료를 모은 자료집을 시기별로 나누어 편집·간행하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방대한 규모 때문에 국책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가급적이면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엽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과거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숙청을 당하거나 잊혀진 인물들의 저작들 가운데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것들을 복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 중에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유용한 지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

9) 주요 인터넷 사이트로는 통일원의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주간 코리아 웹의 [www.kimsoft.com](http://www.kimsoft.com)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자료 인프라스트럭처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연구는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다. 자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에 대한 현재의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차마 입밖에 낼 수도 없다고 하는 현실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2) 발표 지면

북한·통일 분야 학술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양적으로는 많다. 그러나 순수 학술지로서 중립적인 연구단체가 발행하는 북한 전문 학술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것은 정부 산하 단체나 산하 출연 연구기관, 정보기관 산하 연구소, 기업 연구소 등에서 발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통일경제』(월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문제연구』(반년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연구논총』(계간, 민족통일연구원), 『북한경제논총』(연간, 북한경제포럼), 『북한연구』(계간, 대륙연구소; 폐간), 『북한문화연구』(연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학보』(연간,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조사논총』(반년간, 통일정책연구소), 『통일연구논집』(연간,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등의 잡지가 비교적 학술지 성격이 강하며, 『북한』(월간, 북한연구소), 『통일한국』(월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샘』(격월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통일로』(월간, 안보정책연구소), 『북한경제』(월간, 한세정책연구소; 폐간) 등은 시사종합지에 가깝다. 물론 시사종합지라도 학술적 성격의 논문을 게재하지는 않는다. 이 밖에도 『새물결』, 『동화』 등 북한 및 남북관계를 다루는 잡지도 있다. 이 밖에 연구기관들이 간행하는 국제관계, 군사·안보관계 잡지에서도 상당 부분 북한 관련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웬만한 시사종합지도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북한 관련 주제를 취급한다. 최근 대학 부설 통일·북한관계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거의 모두가 연간 1회 정도 발행하고 있다. 숫자를 감안하면 이것도 결코 적은 지면은 아니다.

어느 잡지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위의 잡지들 중에는 과거에는 대북 화해, 포용정책과는 배치되는 극단적인 강경정책만을 고집했던 잡지들도 포함되

어 있다. 어떻든 이 많은 잡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들 지면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북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양질의 연구에 지면을 제공해 준다면 북한연구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연구자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 많은 지면에 신경 쓸 책임이 있다. IMF 위기 시대에 국가적으로 낭비 요인을 줄이는 작업이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연구 분야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많은 북한·통일관계 잡지들이 기본적으로는 정책적, 혹은 ‘정책에 대한 봉사적’ 성격의 것이 많기 때문에 게재 논문도 자연히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상 분석적인 논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연구자 분포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연구자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나 기업 소속 연구자는 이제 북한연구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당연히 정책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다.<sup>10)</sup> 물론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에 비하면 다른 분야 연구가 너무 왜소한 데에 있다. 대학에서 북한 과목을 전공으로 가르치는 연구자는 우선 자료에 쉽게 접할 수 없고, 북한 전공자로서 북한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적다. 대학에 있어서 북한연구의 상대적 취약성은 북한연구에 있어서 아카데미즘을 확립하는 데 한 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면의 양적 수준만 볼 때, 북한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북한관계 논문이 양적으로 어느 분야보다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지적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하면 회의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 민간연구회나 연구자간의 네트워크 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매년 간행되는 북한·통일관계 논문들은 엄청난 분량에 달하지만, 상호 검증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 북한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모럴 헤저드’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싶

10) 각 연구기관에서는 수많은 현상 분석과 정책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감이나 평가는 같은 처지에 있는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필자 한 개인의 역량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다. 이 점에서 현재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천리안을 통해 유료로 서비스하는 ‘북한 정보(IPA)’ 사이트가 진행중인 북한 관련 논문에 대한 색인 및 분류 작업은 북한연구 주제를 조감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잡지에서 나오는 글들은 북한에 관한 사진·연감·기초 자료집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것도 많다. 학문 공동체가 확립되고 그 속에서 북한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상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 나아가 많은 북한 관련 잡지들은 나름대로 주제 선정에서 특성을 살리거나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등 특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개선 노력은 각 잡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방향에서도 학계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면과 관련해서 또 지적되어야 할 것은 북한·통일 분야 학술회의만큼 양적으로 그 수가 많은 회의는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 분야 논문의 상당수가 회의 발표용이라는 것도 그 논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회의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부처나 기관, 언론사 등의 재정적 후원으로 개최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회의의 주제가 규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개최 시점의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한 관계, 그 시점에서의 북한 정세 평가, 혹은 한반도 국제정세가 거의 대부분의 학술회의의 주제다. 이러한 점도 북한연구에 있어서 현상 분석이나 정책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학술회의의 논문이 나름대로 북한 이해에 기여해 왔음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는 지면이 많다는 점과 아울러 생각한다면 북한연구만큼 그 조건이 좋은 분야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수많은 회의와 지면이 북한연구에 있어서 아카데미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발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지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제1차 자료가 불완전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제1차 자료를 단순 가공한 제2차, 3차 자료가 양적으로 제1차 자료를 압도한다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 상황 이외에 북한의 제1차 자료를 접할 때 언어상의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웬만한 이슈라면 제1차 자료를 그냥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해설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면 괜히 쓸데없이 장



황한 해석을 달기보다 독자에게 간단한 해설 정도로 제1차 자료를 그대로 접하게 하는 편이 상황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예컨대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본다면, 북한이 천명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이해하는 데는 1998년 9월 9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한 번 읽는 것이 다른 어떠한 제2차, 3차 해설을 읽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sup>11)</sup>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내외통신에서는 중요한 제1차 자료의 경우는 원문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를 늘리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방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러한 방향에서 더욱 큰 개선이 있어야 한다. 제2차, 3차 자료를 게재하는 잡지들도 되도록 더 많은 제1차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편집 방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1차 자료에 대한 완전한 공개가 바람직하다.

### 3. 연구 방법론 및 주제<sup>12)</sup>

남한의 북한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논쟁을 들자면 ‘김일성 진위 논쟁’과 ‘내재적 접근 논쟁’이라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앞의 논쟁은 한국사회가 처해 있던 냉전적 상황이 조성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다. 물론 북한에는 ‘김일성 신화’가 존재하고 이를 탈신화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북한연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뒤의 논쟁은 북한연구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장 진지한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한편 북한연구는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꾸준히 연구수준

---

11)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북한의 공식 견해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만 보아서는 안되는 측면이 많다고는 하나, 그러한 측면을 제대로 해석해 내기 위해서도 제1차 자료를 읽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12) 이하 본문에서는 여러 연구를 참조하며 인용하고 있지만, 수많은 북한연구 성과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커버할 수 있는 연구문헌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적지 않은 좋은 연구가 누락될 수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만 거의 모든 연구는 90년대 이후의 것에 한정하였다.

이 향상되고 주제가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총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추상적인 쟁점보다는 연구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역사연구 및 비교연구의 부족, 공식 자료 활용에 대한 경시, 구체적인 모델 형성 노력의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보려 한다.

## 1)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논쟁

김일성 진위설과 내재적 방법론 논쟁은 같은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분명 차원이 다른 논쟁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이 두 가지 논쟁 모두 분단현실에 깊이 규정된 남한사회의 척박한 학문적 상황의 산물이었다는 느낌은 버릴 수 없다. 서구의 사회주의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연구'의 기초를 놓은 학자는 소비에트 러시아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E. H. 카라고 말해진다.<sup>13)</sup> 한국에 있어서 내재적 연구에 대해서는 강정인의 평가를 빌리지 않더라도, 한때 북한 옹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비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남한사회 내부의 이데올로기 상황이 작용했던 것이고, 그에 못지 않게 북한연구 전반이 갖는 조건이나 연구상의 빈약함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카의 소련연구나 비슷한 경향을 가진 연구를 두고 '친소적'이라고 비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소련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한 연구들이 갖는 사실적·내용적 풍부함 때문이다.<sup>14)</sup>

카의 소련연구가 개척한 것은 소련 공문서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소련 역사상을 풍부하게 한 데 있다.<sup>15)</sup>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양적·질적

13) E. H. Carr, *Socialism in One Country 1924~1926*, I. II. III (Indianapolis : Macmillan Publishing, 1959).

14) 중국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개척자적인 연구로, Franz S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를 들 수 있다.

15) 여기에는 소련 자료의 입수 정도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카의 연구 이후에는 스톨렌스크 문서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수준,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의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카의 소련연구에서 이룩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소비에트 당과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 형성 과정을 사실대로 그려낸 데 있다. 더구나 이 작업 속에서 당 및 국가 지도자의 공식 이데올로기나 정책 이외에도 최고지도자들 간의 갈등,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중·하급 간부나 각계 각층의 기층 민중들의 움직임 등을 역동적으로 서술, 묘사한 데 있다. 카는 다름 아닌 방대한 소련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이 복잡다단하고 풍부한 사실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해 낸 것이다.

남한의 내재적 방법론이 지닌 한계는 방법론이 지닌 한계라기보다는 북한연구 여건에서 오는 한계라는 측면이 강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내재적 접근에 대한 기존 평가의 문제점은 그 정의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보는 것으로 좁게 정의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sup>16)</sup> 그리고 이를 공식화된 것만으로 본 데 있다. 따라서 이 정의에 의하면 북한의 내재적 발전 논리를 기본적으로 그 결과로만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북한의 유일 체제 확립 이후 시기가 할지라도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내부에 반대론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된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북한의 공식 논리가 귀결되기까지 정책 형성의 프로세스를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는 성과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내재적 방법론은 북한사회의 발전 논리를 하나로만 보았다는 데서 지극히 단순화되었다. 북한체제는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발전 논리가 ‘하나’로 표출되었을지 몰라도, 지도부 내에 이견이 존재하고 그것이 외부로 드러났을 시기에는 설사 그 이견이 후에 실현되지 못하고

16) 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서울: 당대, 1995)의 제4부에 수록된 논문들;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1994 가을), “북한연구 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1993. 8); 이종석 “북한연구 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1990 가을), “1. 연구방법의 모색”,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1995); 강정구, 『통일 시대의 북한학』(서울: 당대, 1996) 제1부 제1장, 2장 등을 참조.

좌절되었을지라도 내재적 논리가 하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 좌절된 이전은 확립된 국가 논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승리한 국가의 논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극단적으로는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과거에 폐기되었던 이전은 새롭게 조명받거나 복권될 수도 있다. 북한체제를 '안'에서 본다고 했을 때, 북한이 지향했던 공식적인 사회주의의 방향이 반드시 단선적인 것은 아니며, 복수의 상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사회를 초기부터 총체적인 체제 형성 과정 전반에 걸쳐서 살펴본다면, 공식적으로 확립된 '주체 사회주의'만으로 북한사회의 경험을 포섭해 낼 수 없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개조 과정이나 문화혁명 시기 연구가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연구되면서 그 역사상이 완전히 변화한 데서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강정인이 상정하는 내재적 방법론도 집필 당시 현실 상황이나 연구성과의 제약을 받아 지나치게 좁게 정의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강정인은 기존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내재적 접근을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였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였으나, 강정인이 확대시킨 내재적 경험도 훨씬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sup>17)</sup> 이종석이 '비판적·내재적 방법론'으로 이름하여 내재적 방법론과 구별을 시도한 것도 나름대로는 내재적 방법론이 하나일 수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sup>18)</sup> 다만 '비판적'이라 함은 내재적이라 함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별개의 범주는 아니며, 그 속에 내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체제 형성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화된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견해를 내재적 경험에 포함시킨다면 굳이 '비판적'이란 표현을 가지고 내재적 접근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강정수도 지적했듯이 '비판적'이란 것은 연구자의 학문 행위 자체에는 당연히 따르는 자세다.<sup>19)</sup> 북한에 대해 옹호적이라는 것은 남한의 이데올로기 상황에서 그렇게 비친 측면이 컸던 것이지 연구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반드시 그러했음

17)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21~23쪽. 여기서는 미키아벨리적인 권력정치, 역사문화적 접근 등이 예로 들어지고 있다.

18) 이종석, "북한연구 방법론 : 비판과 대안", 87~88쪽.

19)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69쪽;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19~20쪽.

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이란 것은 내재적 방법론의 다양성을 구분하는 징표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북한체제 형성이나 변화를 위로부터 보는가 즉 지도부의 정책이나 노선이란 측면에서 보는가, 아래로부터 보는가, 즉 민중 혹은 기층 간부들의 요구나 생활의 측면에서 보는가 하는 것도 충분히 내재적 관점에서 포괄해 낼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론 차원에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가,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가 하는 초보적인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sup>20)</sup> 나아가서 사회주의 개혁에 있어서 외적 요인이 결정적인가, 내적 요인이 결정적인가 하는 것도 내재적 접근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즉 북한체제의 어느 위치에 '내재'하는가에 따라 내재적 접근도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이종석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시민사회론'과 같이 외재적이라고 정의된 많은 요소들이 내재적 접근 속에 포괄되거나 양립할 수 있다.<sup>21)</sup> 내재적 논의도 얼마든지 다양화시키고 풍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 성패 여부는 자료 발굴 및 거기에 입각한 연구성과에 달려 있을 뿐이다.

외재적 접근법도 마찬가지로 다양화될 수 있다. 외재적이란 것도 북한체제 외부의 어느 위치에 '외재'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그것은 한반도의 남쪽에 외재할 수도 있으며, 남쪽에서도 다양한 위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분단체제론'이란 북한체제를 중심에 두면, 한반도 내부에서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sup>22)</sup> 한반도 '내부'에 '외재'해서 본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의 하나일 수도 있다. 같은 외재적 접근도 한반

---

20) 스스로 내재적 접근으로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체제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이 갖는 의미에 대한 최근 논의로서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 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21)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19쪽.

22)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다만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북한사회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남한사회에 의거한 것이다. ‘적대적 상호 의존관계’로서 남북한을 관련시키려는 시도로는 최장집, “통일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 1996).

도 내의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외재적 접근에 대한 보다 엄밀한 구별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외재할 수도 있다. 중국일 수도, 소련일 수도, 루마니아일 수도, 쿠바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을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도 반드시 외재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 공산주의 조류 속에서 일시적이기는 했으나 '개혁 사회주의' 흐름은 북한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었다. 소련의 개인숭배 비판, 중국의 백가쟁명·백화제방 등의 움직임도 북한의 '8월 종파 사건'에 외재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등소평 이후의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베트남의 도이모이 노선도 1984년 북한에 합영법이 제정된 사실과 대응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 외재적인 것만은 아니다. 1992년 헌법개정이나 1998년 9월 헌법개정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선다면, 이미 아시아 사회주의의 개혁·개방 노선이 북한에 내재적인 것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강정인이 외재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의 '공존 가능성'이나 '상호 보완 가능성'과 함께 '상호 대립성'을 말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 변수를 도입하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를 보면,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 외재적이었던 것이 '내재화'해 가는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내재화는 내부에 잠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일정한 조건하에 표면화했을 수도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따라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체제를 형성 과정에서 보면, 내재적인 것이 외재화한 것도 있다. 자본주의적 요소, 시장적 요소는 북한사회의 초기 조건에는 존재했으나 사회주의 개조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한 것이다. 정치세력 관계에서 보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소를 대변했던 세력은 잠복했을 수도 있다. 최근의 탈북자 사태나 사상적 거물의 망명도 커다란 부분은 아니지만 내재적인 것이 외재화한 예이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을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재적인 것이 외재화하고 외재적인 것이 내재화한 예를 볼 때, 두 가

지는 결국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저간의 역사적 경험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은 보완적으로 절충될 것이 아니라 양쪽을 포괄할 수 있는 틀로 종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은 하나로 총체적인 접근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모든 외재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이 종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 가운데 일부 요소만이 선택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합의 위치는 어디다 잡아야 할 것인가? 우선 전세계적으로 붕괴했던 변화했던 사회주의권은 이미 시장경제화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경제의 위치에서 두 접근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조금 좁혀 본다면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 또한 내부에서 다양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전망에 선다면, 시민사회라는 위치에서 종합해 볼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분단체제론’도 북한에 대한 경험에 토대를 둔다면 두 접근을 종합해 낼 수 있는 시도가 된다. 나아가 분단체제론과도 관련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체제’일 수도 있다.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도 포함하여 어떤 사회주의 체제이건 그것은 세계체제에 내재적인 경험이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종합해 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 어떤 입장에서 서는가는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북한체제 붕괴론인가, 변화·개혁론인가는 이러한 전망의 직접적인 예이다.

어떻든 북한체제를 바라볼 때에는 현재 북한체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그 변화 방향에 대한 총체적 전망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소련·동구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도 개혁·개방 노선을 통해 시장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 변화의 필연성은 당연한 전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접근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란 점에서는 그것이 붕괴론에 입각했다고 해도 외재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적 접근처럼 외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련을 붕괴시킨 요인을 내부에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내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나 과거 북한의 역사를 통해 북한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본다는 것도 충분히 내재적 접근에서 가능한 작업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토록 성행했던 북한 붕괴론이 학문적으로 남긴 허망함이다.<sup>23)</sup> 북한 붕괴론이 그토록 유행하고도 이렇다 할 학문적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은 북한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연구의 비중이 적었고 또한 취약했기 때문이다. 강정인의 지적처럼 사회주의권 붕괴에 무력했던 것은 내재적 접근 자체라기보다는 단순화된 내재적 접근인 것이다. 그 반면 북한체제 생존을 점치는 데는 내재적 접근이 상당한 힘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내재적 접근이 충분히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북한 붕괴론이 판을 친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연구에서 오히려 다양화되고 풍부화되어야 할 접근법은 내재적 접근법이다. 그것은 북한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내재적 접근이 아직은 허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붕괴론과 관련해서 빼뜨려서는 안될 것은 매스컴에서 북한 붕괴를 주장했던 많은 필자들이 북한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붕괴론은 북한연구에 외재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외재적, 내재적 가릴 것 없이 북한연구 자체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 2) 방법론과 실제 연구의 괴리

이상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에 대해 언급해 보았으나, 여기서 거론한 방법론들이 갖고 있는 의의를 인정한다는 것과 그것들이 실제로 북한연구에 적용되어 어느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는 전혀 별개인 것이 현실이다. 내

---

23) 필자도 북한 붕괴론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줄고, “북한 붕괴는 반드시 군사 충돌 수반한다”, 『신동아』(1996. 5). 붕괴론을 포함하여 한·미·일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정세 평가를 정리한 것으로, 김용호·서동만·이근, “북한 정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통일경제』(1997. 1). 북한 붕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줄고, “북한 붕괴론에 대하여”, 건국대 한국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개방 가능성과 붕괴론의 허와 실’(1997. 12.)의 발표 논문.



재적·외재적 접근 모두가 그 유효성을 설득력 있게 말한 바 있는 것까지 사회주의 연구 방법론도 북한이란 대상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연구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가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고, 부족한 자료나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연구에 있어서는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자료도 부족할 뿐더러 기존 자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못해 왔다. 앞에서 남한 내 자료 활용의 제약에 대해 장황하게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연구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연구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다룬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북한 노획문서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법론과 실제 연구의 괴리가 나타난 데에는 북한 공식 자료의 성격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이래 북한 공식 자료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는 중요한 사실적 정보가 그다지 실리지 않게 된다. 북한의 모든 지적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 교시의 주석 내지 해설 수준으로 저하된다. 따라서 북한의 1970년대 이후 시기에 대한 외부의 연구는 주로 이 데올로기를 근거로 현실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다양성이나 풍부함도 실제 북한연구에 적용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와는 별개의 일이었다.

다만 1990년대 들어서서 외부로부터 북한 방문의 기회가 많아지고 탈북자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정보 소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확실히 북한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공식 매체는 등장하지 않는 많은 사실이나 공식 이데올로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sup>24)</sup> 1980년대까지는 북한 방문자의 수기가 문헌 이외에 북

24) 1990년대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교적 정리된 질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취록한 것으로는, 『통일한국』 96년 1월호부터 1997년 8월호까지 연재된 ‘귀순자 쟁점 대답’을

한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면,<sup>25)</sup> 1990년대 이후는 탈북자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탈북자들을 북한연구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유능한 질문자가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부터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추측되는 정보기관의 탈북자 인터뷰 내용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증언한 정보가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학문적인 검증과 그러한 과정을 통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기나 증언 등이 간행되어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sup>26)</sup> 그런데 증언 자료의 경우 대개가 정보기관 등의 중개를 거쳐 출판되지만, 그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감한 내용을 담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증언자와 접촉하여 중요한 사실의 경위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기가 어려운 현 상태도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어 가야 한다.

### 3) 공식 자료의 효용성<sup>27)</sup>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북한연구에 있어서 북한에서 공간된 공식 자료의 실증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일정한 유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공식 자료는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기는 해도

---

참조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로서는,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를 들 수 있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도 탈북자 증언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채 매우 조야한 탈북자 증언으로는, 『북한실상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내외통신사, 1995).

25) 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수기나 방문기 목록은, 최완규, “북한연구 방법론: 연구 시각, 자료, 이론틀”, 『계간 북한연구』(1995 봄), 136쪽.

26) 『최은희·신상옥 수기』(상)(하)(서울: 행림출판사, 1994); 고영환, 『평양 25시』(서울: 고려원, 1992);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중앙일보사, 1995); 이한영 『대동강로열 패밀리 서울 잠행 14년』(동아일보사, 1996) 등.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방대한 양에 달한다.<sup>27)</sup> 일정한 방법상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공식 문헌이야말로 북한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우선 북한 내외에서 선전 자료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해도 북한 내에서 공식 자료가 가지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로동신문』이나 『민주조선』, 『근로자』 등 북한의 공식 매체는 어쨌든 북한 주민의 정신 생활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최소한 북한체제의 공식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 간부 인사, 이데올로기 등에 관한 한 공식 매체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자료이다. 북한의 공식 문헌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북한연구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작업이 된다.

다음으로 김일성 발언의 비중도 절대적이다. 연설, 논문, 보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김일성 발언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유일 체제 확립 이후 김일성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다른 어떤 고위 간부도 입밖에 낼 수 없는 사실들을 말할 수 있었다. 『김일성저작집』이야말로 북한 내 다른 어떤 간행물보다도 가장 풍부한 사실의 보고이다. 이것은 과거뿐 아니라 극히 최근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김정일의 주석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때까지 북한 외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주석제 폐지를 시사해 준 북한 유일의 공식 자료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편집·간행한 『김일성저작집』이었다.<sup>29)</sup>

북한 공식 자료 가운데 가장 생생하고 따라서 귀중한 자료는 북한의 내부용 자료이지만, 이러한 자료는 가장 입수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예컨대 과거의 것으로는 당 정치위원회 결정집, 조직위원회 결정집, 상무위원회 결정집으로서 연구자 사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전반적인 국내 소장 상황은 파악되지 않

27) 북한 공식 자료의 효용성 및 활용 방법에 관해서는, 최완규, “북한연구 방법론: 연구시각, 자료, 이론틀”; 이종석 “제1부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1995)에 상세하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28) 북한 공식 자료의 목록과 국내 소장처에 대해서는, 북방정보자료협의회편 『북한 및 공산권 자료목록: 전국 특수 자료취급기관 소장』(1989)을 참조.  
 29) 『김일성저작집』 제41, 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고 있다. 정보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소장된 것이 있다면, 우선 상당 시간이 경과한 것부터라도 자료집 형태로 연구자 사이에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것으로 비공개 김일성 연설이나 김정일 연설 등이 정보기관에 입수되어 일부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나,<sup>30)</sup> 가능한 한 더욱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연구자 사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에서 공간된 자료는 간행 시점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원문 부분이 개찬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도 북한 공식 자료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원인이다. 다만 흥미 있는 것은 오히려 개찬 자체가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북한 내부 자료들을 입수할 수 없는 한에서는, 시기적으로 공식 자료들을 크로스 체크해 봄으로써(예컨대 『로동신문』과 김일성 발언 등) 서로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거나, 당시 발표된 원문과 나중에 편집된 원문의 차이를 대조하거나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나 시사점을 나중에 찾아낼 수도 있다.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공식 문헌이 갖는 자료상의 한계는 일정 부분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북한연구에 있어서는 북한의 공식 간행물을 극도로 경시하거나 거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 간행물이 북한연구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공식 자료를 북한연구에 인용하는 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식 자료에 대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연구 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 북한 과목을 교육할 때 북한의 공식 문헌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일정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는 ‘북한연구 문화’의 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제1차 자료에 대한 개방 조치가 선결 조건이 된다. 특히 영상 자료의 일반 공개 확대는 그 압도적인 매체적 영

30) 예컨대, “김정일의 육성 테이프”, 『월간조선』(1995. 10); 김정일의 연설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1997. 4); 김정일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백학순, “북한경제 실패에 대한 하나의 해석”, 『통일경제』(1997. 9)에서 재인용.

항력을 감안할 때 절실한 과제가 된다.

#### 4) 모델 설정 및 연속과 단절의 문제

북한체제의 특징은 초기부터 최근 사망했을 때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이 최고 지도자였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권력승계가 이루어졌고, 김일성의 유훈통치도 부분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터라 북한연구는 김일성 연구, 김정일 연구와 구분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 역사에 대한 연구나 사료 발굴이 김일성에 집중되었고, 학문적인 여과 없이 김일성 체제에 대한 공격 재료로 쓰여진 것도 사실이다. 북한체제는 외부에는 베일에 쌓인 채 신화가 지배해 온 만큼,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을 밝히는 단순한 사료 발굴만으로도 취약성을 안고 있는 체제이다. 특히 북한의 공식 역사연구는 외부와의 학문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김일성의 역할이 과장되어 있다. 실증적인 뒷받침이 없는 채 역사와 자료와의 연결관계가 무너져버린 점이 객관적인 연구를 더 어렵게 하였다. 북한 역사의 신화를 벗겨내는 작업은 그 외재·내재적 접근과 관계없이 학문적인 기초 작업으로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어떻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의 '초장기적 연속성'으로 인해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체제의 형성·발전에 있어서 '연속성'과 '단절'의 문제, 북한체제의 '단계 구분'의 문제 등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의 공식연구에 있어서는 과도기론으로서 북한체제의 단계 구분 문제가 논쟁이 된 적이 있었으나, 남한 연구자의 독자적 입장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가장 초보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시기를 언제로 잡을 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김정일과 김일성의 관계에 있어서 김정일 체제가 언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이 점에서는 중요한 테마가 된다. 앞으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와 김일성 체제와의 공통점과 차이, 즉 비교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할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주제는 총체적으로는 북한체제에 관한 모델 설정과 관련하여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발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하든 외재적 접근법에 입각하든 북한체제의 경험을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귀결이 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모델 형성 작업은 주로 외국의 북한연구자들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2)</sup> 대표적인 것으로서 브루스 커밍스(B. Cumings)의 ‘사회주의적 코포라티즘’,<sup>33)</sup>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유격대 국가’,<sup>34)</sup>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의 ‘수령제’,<sup>35)</sup> 거번 매클랙(G. McCormack)의 ‘신전체주의’<sup>36)</sup>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 학자들의 작업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한국 학계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이론화를 위한 독자적인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이종석의 ‘유일지도체제’<sup>37)</sup>에 대한 이론화가 거의 유일하게 실증적 연구에 입각한 외로운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 학계의 현황은 북한연구의 이론적·실증적 연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인지 모른다.<sup>38)</sup>

이러한 이론화 작업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우선 이론화 레벨에 대한 구별이 없이 모델 형성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즉 시스템(system) 내지 사회구성체 수준, 레짐(regime) 내지 정치체제 수준, ‘인 지배

31) 김정일에 김일성과 거의 같은 비중을 두고 김일성-김정일 체제로서 하나로 다룬 저작은 해외의 연구이지만, 徐大肅, 『金日成と金正日：革命神話と主體思想』(岩波書店, 1996)이 유일하다.

32) 이론화 내지 모델 형성에 대한 전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和田春樹, 『北朝鮮 遊撃隊國家の現在』(岩波書店, 1998), 16~20쪽.

33) B. Cumings,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No. 3(1983).

34)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1993. 10); 『北朝鮮 遊撃隊國家の現在』(岩波書店, 1998).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서는, 이종석, “유격대 국가론과 현대북한”, 『현대북한의 이해』.

35) 鐸木昌之, 『北朝鮮：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大學出版會, 1995).

36) G. McCormack,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1993).

37)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38) 이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적 쟁점 및 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체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수준 등에 대한 의식적인 구별 없이 작업이 진행된 점이다.<sup>39)</sup>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 각 수준에서의 연속성과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준의 상호관계도 적절하게 분석될 수 없었다.

우선 첫번째 시스템 수준에서 보면, 북한의 이른바 '국가 사회주의' 시스템이 언제 확립되었는가에 관한 의식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sup>40)</sup> 때문에 '과도기'로서의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못하였다.<sup>41)</sup> 이 문제는 전후 1950년대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 있어서 북한

39) 이 점에 관해서는, 류길재 "북한체제 변화론의 재고찰", 『한국 정치 사회의 새흐름』(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에서 이론적인 수준을 구별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부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주의'와 '당-국가 체제를 양립시키고 있는 논의 같은 것이다. 전체주의론이 갖는 이론적 문제점은 전체주의 '이후'에 대한 이론적 함의가 체제 '붕괴'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 과정이나 개혁·개방을 포함한 그 변화의 내적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당-국가체제론이 갖는 장점은 '당-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다양한 변용을 분류해 내고 그 과정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40) 이 점에 관해서, 초기 단계의 북한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보는 연구로는,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서울: 나남, 1997), 제4장, 제12, 13장, 특히 734~73쪽. 이에 대해 시기를 늦추어 1961년도 전후에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했다는 입장으로는, 즐고, "북한의 전통과 근대", 역사비평사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1996);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1996). 필자는 1946년 8월 북로당 창설 시기부터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성 시기에 걸쳐서 '인민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되어 한국전쟁 이후 농업 집단화를 중심으로 한 전 사회의 사회주의 개조를 거쳐 대체로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국가 사회주의' 시스템이 확립된 것으로 본다. 이후 1970, 80년대에도 국가 사회주의 시스템은 근저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90년대 전세계적인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큰 격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41) 인민민주주의 단계문제를 의식하면서 초기 북한체제를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소비에트) 체제로 보는 연구로서는,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고려대 정치과 박사학위 논문, 1995). 국내에서 인민민주주의 문제는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에서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다만 류길재는 이를 소련에 의해 외삽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수립된 '소비에트 국가'라고 보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연구로는, 김성보, "북한의 농업개혁론과 농업개혁 1945~1958"(연세대 사학과

내 노선투쟁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명되어야 할 과제다. 또한 이 쟁점에 대한 해명은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시스템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작업이다.

두번째로 레짐 수준에서 보면, 이른바 ‘당-국가 체제’의 형성 시기 및 그 변화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못하였다.<sup>42)</sup> 예컨대 1946~1947년 당시의 당-국가 체제와 1961년 시기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군의 위치, 빨치산과의 비중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관계, 당-군관계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근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변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김정일의 ‘군 중심 체제’, 특히 1998년 9월의 권력승계 및 헌법 하에서의 ‘국방위원회 체제’에 대한 성격 규정과 직결되어 있다. 새로운 레짐을 종래와 변함없이 여전히 당-국가 체제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군-국가 체제’, ‘군-당-국가 체제’, ‘군-국가 체제’ 가운데 어느 것으로 변화했다고 보아야 하는가는 과거에 대한 이론적 검토 없이는 해명할 수 없다.<sup>43)</sup>

세번째로 ‘1인 체제’와 권력구조의 수준에서는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일성의 위치의 연속성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이 소홀하였다. 1946년 정권 수립 당시 김일성의 위치와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빨치산파가 당정군을 장악한 시기에 있어서 김일성의 위치, 나아가 1960년 말~1970년대 초 유일 사상체계 확립 운동 이후 김일성의 위치에 대한 구별 작업이 필요하다.<sup>44)</sup> 여

---

박사학위 논문, 1997); 서동만, 앞의 글들.

- 42) 이 점에 대해서는, 류길재, 앞의 글에서 1946년 북로당 창립과 함께 ‘당-국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앞서 나온 서동만의 논문들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 43)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군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로는, 한국정치학회 1997년도 연례 학술회의; 북한통일 분과 Roundtable에서 발표된 김구섭, 이종석, 김영수, 류길재의 발제 참조. 해외 연구자의 본격적인 논의로는, Haruki Wada,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a Dissertation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28~29, 1998. 와다 하루키는 북한체제가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에는 조선로동당 내 계파관계의 변천, 빨치산파의 역사성 등 식민지 시대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된 분석이 그 전제가 된다. 이러한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 1980년 권력계승자로서 김정일이 당 공인을 받은 이후,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그 이전까지의 ‘김일성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는 그 카리스마성과 권력 장악도에 있어서 ‘김일성 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별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세 수준에서의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 수준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sup>45)</sup> 특히 세번째의 ‘1인 체제’ 문제, 거기에 따르는 개인숭배의 절대화는 북한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 당-국가 체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인 현상인가, 그것이 모택동 이후 중국이나 스탈린 이후 소련과 같이 집단 지도적 체제로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인가 등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과거에 있어서 세 수준의 상호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미 1998년 헌법개정에서 나타나듯이 시스템 변화, 레짐 변화가 두드러지는 북한체제에 있어서 김정일의 정치적 운명을 점쳐 보려면 이러한 이론적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상호관계의 차원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처럼 개혁·개방으로 국가 사회주의 시스템은 시장경제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당-국가 체제는 비교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북한의 경우와의 비교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 5) 역사연구, 비교연구의 부족

역사연구가 크게 부족하다 함은 과거연구, 과거와 현재를 관련시켜 보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함이다. 북한은 정권이나 체제의 정당성을 과거 역사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와 정치가 일체화되어 있다. 이는 내부

44) 이종석의 ‘단일지도체제’와 ‘유일지도체제’의 구분은 이 수준에서의 이론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당 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당내 계파의 존재를 기준으로 시기적인 구분을 행하고 있다. 다만 ‘단일’과 ‘유일’의 차이에 대한 설명 등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45) 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으로는, 서동만, 앞의 글들.

권력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역사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전쟁만 해도 북한정권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이는 대남·대미관계, 대중·대소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1930년대 이후 1945년까지의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도 건국 신화로서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청산 및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역사성은 북한 내부 권력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빨치산 세력의 성장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이러한 측면에 착안한 연구이지만,<sup>46)</sup> 혁명 제2세대의 경우도 김정일이나 권력 핵심층의 구성에서 나타나듯이 혁명 제1세대의 자제가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역사연구 없이는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실증해 준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역사연구 부재는 북한연구에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1950년대, 1960년대 연구는 거의 공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7)</sup> 역사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 북한과 최근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구별 없이 혼재되어 온 경우도 많다. 더구나 연구가 비교적 많아지는 1970년대 이후도 1980년대, 1990년대 등 각 시대와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기에는 김일성이란 절대 권력자가 계속 집권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남북한 대치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어려웠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쌓아진 북한 이미지는 ‘환영’일 수 있으며, 역사연구 없는 현상 분석은 거대한 사상누각일 수 있다.

물론 북한연구에 있어서도 역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시

46) 이러한 연구로는 해외에서는, Dae-Sook Suh, *Kim Il Sung: North Korean L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출판사, 1989); 和田春樹, 『金日成と滿洲抗日戰爭』(平凡社, 1992). 국내에서는,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47) 1950년대 북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심포지엄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성과 개혁의 전망: 1950년대 사회주의 이행 논쟁과 정치사회 갈등’(1997. 5)에서 발표된 김성보, 김연철, 김재용, 서동만의 논문과 앞서 나온 서동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기가 있다. 바로 1945~1953년의 시기이다. 다름 아닌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북한지역에서 확보한 ‘노획 북한 문서’의 존재 때문이다. 역시 역사연구에 있어서는 주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료가 주제를 결정하는 면도 강하다. 이 시기 연구에는 이미 적지 않은 중요한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sup>48)</sup> 소련 자료를 발굴한 일련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노획문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희귀한 북한자료를 러시아에서 발굴하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sup>49)</sup> 다만 이 시기 연구에서도 연구상의 불균형은 존재하는 듯하다.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총론이 각론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강원도 인제군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시기 연구에서는 적지 않게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각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쟁점을 정리하고, 나아가 연구상 공백 부분을 채워 가는 일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연구의 부족 내지 불균형은 당연히 북한 역사를 한반도 전체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부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sup>50)</sup> 분단 과정, 한국 전쟁, 남북한 관계 등 관계사적 연구에는 당연히

48) 이 시기에 대해서는,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강정구, 『좌절된 사회혁명: 미군정하의 남한, 필리핀과 북한연구』(서울: 열음사, 1988) 외에 Hak-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A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북한의 국가 수립 과정을 남북한 양측의 분단 국가 수립 과정과 결합시켜 분석한 연구로는 정해구,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 과정 연구 1947. 5.~1948. 9.”(고려대 정의외 박사학위 논문, 1995).

49) 김성보, 앞의 논문에서는 토지개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소련 문서를 발굴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소련 문서를 발굴하여 1945~1948년 시기의 북한체제를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로서는 진현수, “1947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역사와 현실』 제19호, 1996; ЧЖОН ХЮН СУ,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ПЕРВЫЕ ГОДЫ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1945~1948 гг(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경제 개혁 1945~1948”, 모스크바대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 1997).

50)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 협동화를 조선시대 봉건적 토지소유제에 대한 전통적 농업 개혁론의 전통과 관련시켜 그 의의를 평가한 연구로는, 김성보, 앞의 논문. 이 논문은 김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만, 북한체제 연구 일반에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웠다. 북한체제도 같은 한민족의 절반이란 점에서는 북한체제의 경험이 민족사 전반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국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테마가 된다. 북한체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그것이 민족사 전체에 있어서 갖는 의미를 자리매김해 보는 작업은 북한체제의 경험을 ‘타자’, ‘저들’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포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역사연구에 못지 않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북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연구가 불가결하다는 것이다.<sup>51)</sup> 그런데 한국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까지 사회주의 체제 연구가 워낙 일천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체제 연구가 개시되자마자 오래되지 않아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매력의 단기간 안에 사라짐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소련, 동구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식어갔고, 세계적인 연구주제인 ‘체제 전환’에 대한 연구도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지역연구 차원에서 소련·동구 연구, 체제 전환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도 비교 차원에서 북한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리고 확대된 교역관계 때문에 중국연구는 지역연구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연구와의 접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분석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좀처럼 개혁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으며, 김일성 사후 북한 붕괴론이 급속히 확산된 것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북한체제가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회주의 개조 과정, 농업집단지화, 개인숭배, 대중 노선, 그 밖의 여러 주제에 걸쳐 의미 있는 비교연구가 가능함에도 그다지 성과는 없었다. 중국과의 비교는 물론 소련이나

---

용섭의 조선후기농업사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북한연구에 접목시킨 연구라 할 수 있다.

51)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 논쟁에서 인용한 강정구, 강정인, 송두율, 이종석 외에도 북한연구 방법에 대해 논한 연구자들은 누구도 비교 사회주의적 방법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실제 비교 사회주의적 연구의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도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동서독 통일에 따라 독일 통일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붕괴론의 영향에 따른 것이며, 그 대부분도 총론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연구에 있어서 비교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외부에 대한 북한체제의 고립 상황은 북한연구의 '고립 상황'을 불러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일반성'을 압도하는 듯이 보이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과도한 특수성'이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곤란한 상황 속에서 국가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데서 나온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 사회주의로서의 북한체제 인식이 확인되면서 북한사회의 특수성도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연구가 상대적으로 서구의 중국 내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구에 비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비교연구에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체제의 핵심적인 측면은 모두 흥미 있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이다. 예컨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1인 체제'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 문화혁명 당시 중국의 모택동 체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체제가 모두 좋은 비교 대상이다.<sup>52)</sup>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에 따른 군부 중심의 신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정권, 중국 문화혁명 당시 일시적인 군부의 역할 등이 비교 대상이 된다. 나아가서 피노체트 정권, 수하르토 정권, 박정희 정권 등 제3세계의 군부 독재 체제도 비교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 못지 않게 남북한의 비교연구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여기에는 남북한을 하나의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는 이론틀이 열쇠가 된다.<sup>53)</sup> 궁극적으로

52) 이 주제와 관련된 비교연구로서, 박형중, "루마니아와 북한 :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1995 상반기). 그 밖의 유익한 비교연구의 예로서, 서재진 외, 『사회주의 체제 개혁 개방 사례 비교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Hyuk-Bum Kwon, "The Politics of Transition to Socialism in Cuba and North Korea"(A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Massachusetts University, 1990).

53) 남북한 비교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시도로서 남북한의 군비문제를 대상으로 '국가론'이란 하나의 이론틀을 가지고 비교한 연구로는,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

로는 남북한 관계 연구, 남북한 비교연구, 하나로서의 남북한 전체 연구 등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정부 들어서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협력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서독 관계보다 중국-대만관계가 더욱 현실성이 있다는 상황판단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와 동서독 관계뿐 아니라 중국-대만관계 등도 현실적인 비교 대상이 된다.

## 6) 총론 위주 및 부분연구 부족

북한연구에 있어서 정치(이데올로기·군사·안보 등 포함)연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북 경제 협력이 진전되면서 경제연구도 비중이 커지고 전문 잡지도 간행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정치·경제 분야가 비대해졌다는 점에서 그 밖의 사회·문화·예술 등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경제연구라 할지라도 총론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부분연구나 작은 이슈에 대한 천착이 매우 부족하다. 정치연구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분석 내지 정치체제 분석이 지배적이며, 엘리트<sup>54)</sup> 당-군관계<sup>55)</sup> 당-정관계

---

법문사, 1998). 이른바 ‘역사추상적 접근’에 의해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한 연구로는, 강정구, 『좌절된 사회혁명』.

- 54) 김성보, “해방 후 북한의 엘리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998년 봄. 이 논문은 해방 이후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의 엘리트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연구이다. 항일 빨치산 인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엘리트 연구로는,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247~259쪽. 역시 엘리트 연구 현황은 현상 분석이 압도적이다. 『김정일 북한대백과』, 『신동아』(1997. 1) 별책부록; 중앙일보사 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김정일』(중앙일보사, 1994);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55) 당-군관계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북한정권 수립 과정에서 조선인민군의 위치에 관한 연구로는,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2장. 정권 형성기 및 한국전쟁 시기의 당-군관계에 관해서는,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1946~1961”,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6). 이 중 일부는 “북한 당-군관계

등 분야에서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기업 관리, 공장 관리 시스템,<sup>56)</sup> 근로 단체,<sup>57)</sup> 대중운동<sup>58)</sup>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좀더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역사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도 특정 시기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특정 시기의 특정 분야에 대한 북한연구나 자료, 정보가 축적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축적 위에서 총론적인 북한연구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모든 분야가 연구대상이 된다. 예컨대 북한의 기술 수준, 정보화 수준,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 등 과학 분야와 자연과학·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북한의 정치·군사·경제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분야임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이다.<sup>59)</sup> 1950년대 말 소련이 미국에 안겨준 ‘스푸트니크 쇼크’가 남한의 북한연구에도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자료의 축적 및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채로 정치·경제연구가 일방적으로 독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북한연구는 철저히 실용주의적 방향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자료집 간행이나 기초연구가 시급하다. 한국의 모든 분

---

의 역사적 형성 : 창군기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중심으로”, 『유석렬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1997. 9.),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 한국전쟁부터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8권 제2호(1996 하반기)로 각각 발표하였음. 또한 최완규, “초기 조선인민군의 발전과정과 당-군관계”,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을 참조

- 56) 산업 관리 체제의 변화를 정치체제의 변화와 관련시켜 분석한 연구로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 57)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종석 편, 『북한근로단체연구』(성남 : 세종연구소, 1998).
- 58)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 스타하노프운동 및 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청호 외 편,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 59)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 교류 방안”,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정보화 시대와 여성인력’(1996. 11.) 발표 논문. 이 논문은 북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중심으로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흥미 있는 연구다.

야의 연구자가 북한연구자와의 협력 아래 자기 전문 분야의 거울로서 해당 분야의 북한을 연구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만하다.

## 4. 맺음말

1990년대 북한연구를 살펴보면서 확인되는 것은 남한의 북한연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모든 학문 분야가 그렇듯이 기초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데에 북한연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사회에서 북한·통일·안보 분야는 '거대한 지식 산업'이라고 일컬어지기조차 하지만, 그 규모를 감안하면 북한연구만큼 양적으로 많이 생산되면서도 그 토대가 허약한 연구분야도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자료 이용과 공개 등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된다. 자료 이용상의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축적된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연구가 새롭게 발전할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광범위한 북한 지면을 살리고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평가와 검증이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매년 그해에 나온 북한연구 성과를 분야·쟁점별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논의만 있어도 북한 분야의 '모럴 해저드'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북한연구도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여전히 수많은 기복을 거치겠지만,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어 가리라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북한체제가 고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남한의 북한연구도 남북한 대치라는 냉전적 상황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입증도 반증도 할 수 없다'는 기막힌 상황 앞에서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운 학문적 현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남한의 북한연구도 현실을 통해서 검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는 누구라도 북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는 가고 북한연구도 전문성이 인정받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장기간의 학문적·지적 수련과 연구경험의 축적 속에서 길러진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듯하다.

남북한 관계의 진전 속에서 남한의 북한연구는 남한의 북한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의 자기 인식을 시야에 넣은 것이 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남한의 북한연구는 북한이란 현실에 의해 검증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남한의 북한 인식도 북한의 자기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큰 정도로 이제는 남한의 북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남한의 북한연구는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북한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연구는 과거 그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처럼 무책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보사, 1995).  
 강정구, 『통일 시대의 북한학』(서울: 당대, 1996).  
 \_\_\_\_\_, 『좌절된 사회혁명: 미군정하의 남한, 필리핀과 북한연구』(서울: 열음사, 1988).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1994 가을).  
 \_\_\_\_\_, “북한연구 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1993. 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일저작선』(1995).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북한연구자료집』 제1집~11집.  
 고영환, 『평양 25시』(서울: 고려원, 1992).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지역정보총람』 제1~7권(1998).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제1권~22권.
- “귀순자 쟁점 대담”, 『통일한국』 96년 1월호부터 97년 8월호까지 연재.
- 김성보, “북한의 농업개혁론과 농업개혁 1945~1958”(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 \_\_\_\_\_, “해방 후 북한의 엘리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1998 봄).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 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 정외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용호·서동만·이근, “북한 정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통일경제』(1997. 1).
- 『김일성저작집』 제41, 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정일 북한대백과』, 『신동아』 별책부록(1997. 1).
- “김정일의 육성 테이프”, 『월간조선』(1995. 10).
-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1997. 4).
- 김학준, 『한국정치론사전』(서울: 한길사, 1990).
- 류길재, “북한체제 변화론의 재고찰”, 『한국정치사회의 새흐름』(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 \_\_\_\_\_,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 논문, 1995).
- \_\_\_\_\_,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스타하노프운동 및 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청호 외 편,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 『멀티미디어 북한백과 1945~1997』 CD ROM(서울: 중앙일보사, 1997).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서울: 나남, 1997).
-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 교류 방안”,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정보화 시대와 여성인력’(1996. 11) 발표 논문.
- 박형중, “루마니아와 북한: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통일문제연구』(1995 상반기).
-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_\_\_\_\_,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 백학순, “북한경제 실패에 대한 하나의 해석”, 『통일경제』(1997. 9).

북방정보자료협의회 편, 『북한 및 공산권 자료목록 : 전국 특수자료취급 기관 소장』(1989).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북한실상종합자료집 :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서울 : 내외통신사, 1995).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감 1968』(1968), 『북한총람』(1983), 『북한총람』(1996).

『북한인명사전』, 북한연구소(1996), 중앙일보(1990), 서울신문(1995) 등.

서동만, “북한의 전통과 근대”, 역사비평사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1996).

\_\_\_\_\_,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형성 1946~1961”,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1996)

\_\_\_\_\_, “북한 붕괴는 반드시 군사충돌 수반한다”, 『신동아』(1996. 5).

\_\_\_\_\_, “북한 붕괴론에 대하여”, 건국대 한국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개방가능성과 붕괴론의 허와 실’(1997. 12) 발표 논문.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 나남, 1995).

서재진 외, 『사회주의 체제 개혁 개방 사례 비교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송두울, 『역사는 끝났는가』(서울 : 당대, 1995).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서울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심포지엄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성과 개혁의 전망 : 50년대 사회주의 이행 논쟁과 정치사회 갈등’(1997. 5월)에서 발표된, 김성보, 김연철, 김재용, 서동만의 논문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1995).

\_\_\_\_\_, 『조선로동당연구』(서울 : 역사비평사, 1995).

\_\_\_\_\_, “북한연구 방법론 :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1990 가을).

이종석 편, 『북한근로단체연구』(성남 : 세종연구소, 1998).

이한영,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 잠행 14년』(서울 : 동아일보사, 1996).

전현수, “1947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역사와 현실』 제19호(1996).

정경모·최달곤 편, 『북한법령집』 1~5권(서울 : 대륙연구소, 1990).

정해구,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 과정 연구 1947. 5~1948. 9”(고려대 정외과 박

사학위 논문, 1995).

- 중앙일보사 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최완규, “북한연구 방법론: 연구시각, 자료, 이론틀”, 『계간 북한연구』(1995 봄).
- \_\_\_\_\_, “초기 조선인민군의 발전과정과 당-군 관계”,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최은희·신상옥 수기』(상)(하)(서울: 행림출판사, 1994).
- 최장집, “통일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 1996).
- 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3권(1988).
- \_\_\_\_\_,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1~4권(1988).
- ‘한국정치학회 1997년도 연례학술회의: 북한통일 분과 Roundtable’에서 발표된 김구섭, 이종석, 김영수, 류길재의 발제문.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 徐大肅, 『金日成と金正日: 革命神話と主體思想』(東京: 岩波書店, 1996).
-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東京大 博士學位 論文, 1995).
-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 和田春樹, 『北朝鮮 遊撃隊國家の現在』(東京: 岩波書店, 1998).
- \_\_\_\_\_, 『金日成と滿洲抗日戰爭』(平凡社, 1992).
- \_\_\_\_\_,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1993. 10).
- Carr, E. H., *Socialism in One Country 1924~1926*, I. II. III(Indiannapolis: Macmillan Publishing, 1959).
- Cumings, B.,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No. 3(1983)
- Kwon, Hyuk-Bum, “The Politics of Transition to Socialism in Cuba and North Korea”(A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Massachusetts University, 1990).
- MaCormack, G.,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1993).
- Paik, Hak-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A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 Shurma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Suh, Dae-Sook, *Kim Il Sung : North Korean Leader*(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 청계출판사, 1989).

Wada, Haruki,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a Dissertation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28~29, 1998.

ЧЖОН ХЮН СУ,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  
ЕОБРАЗО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ПЕР  
ВЫЕ ГОДЫ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1945~1948  
г г(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경제 개혁 1945~1948년, 모스크바대학 역  
사학 박사학위 논문, 1997).

주요 인터넷 사이트 통일원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주간 코리아 웹브 [www.kimsoft.com](http://www.kimsoft.com)

(Abstract)

## Reflections and the Task of North Korean Studies

*Suh Dong Man*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Political Science)

The IMF crisis and the bursting of the economic bubble has implications for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We are now reflecting on our mistakes and self-examination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is more important than in any other field. North Korean studies have not only been influenced by the post-Cold War situation, but by the on-going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ven though the ideological situation has been alleviated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limitations in the classification and use of primary materials continue. The barriers to the use of primary materials must be eliminated as soon as possible--an anthology of primary materials on all aspects of politics, economy, military, society, culture, arts and science urgently needs to be produced.

There are many journal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corporate institutions, but there are few politically neutral academic journals. By supplying objective and exact information on North Korea, such journals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 on North Korean studies should take a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se journals.

Official documents are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in studying North Korea and scholars should be accustomed to using them, so teaching in the use and interpretation these documents must be given greater weight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This requires the construction of "a

North Korean studies culture." Theoretical works on North Korea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levels of theorizing must be differentiated as follows : the level of the system or social formation, the regime, and power structure.

Another problem in North Korean studies is the shortage of historical and the comparative studies. Owing to this deficiency, the images of both the early and recent periods of North Korea have been mixed indiscriminately. Moreover,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of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it is essential to make comparisons with other socialist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Cold War, general studies on socialist countries were not accumulated in South Korea so comparative studies on North Korea were rare before the time of Perestroika.

As studies on the politics and economy of North Korea are too often compared with other themes in humanitarian fields, studies on society, culture and the arts must be developed further. There are many broad or general studies but few on specific issues. Even in the field of politics, themes are not balanc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in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studies in South Korea are starting to accommodate North Korea's self-understanding. From now on North Korean studies in South Korea will have an influence on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itself.